

## 지역별 고용의 특성과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이삼열\*, 장용석\*\*, 정의룡\*\*\*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별 고용의 특성과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각 지역별 변화할당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들이 지니고 있는 고용의 특성과 그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각 지역들의 고용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특수적 요인, 자원배분적 요인, 그리고 산업특화적 요인 등의 상이한 조합임을 밝혔다. 이러한 상이한 결합 요인들에 대해 각 요인들의 분산이 지역들의 고용증가율의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기여도의 크기를 비교하여 지역의 고용성장에 대한 각 요인들의 전반적인 크기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수적 요인이 매우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배분적 요인은 중간, 산업특화적 요인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적 변화할당분석과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에만 의존하게 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간과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9년-2006년의 기간 동안 가장 큰 변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시기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2년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는 당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며 관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실상 이 시기에 오히려 지역특수요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성장역량은 감소하였음을 지적하고,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지역특수적 요인에 근거한 지역개발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별 고용성장, 지역별 고용특성, 변화할당분석

- \* 주저자,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정책이다(samyoul@yonsei.ac.kr).
- \*\*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거시국가비교이다(yongsukjang@yonsei.ac.kr).
-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관심분야는 노동정책, 고용정책, 복지제도, 복지정책이다(cochpotato@naver.com).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별 고용의 특성과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치우친 편중된 과거의 경제발전 방식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그리고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둘러싼 기존의 국가 간 경계들이 해체되고 이와 관련된 경쟁체제들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지역이 경쟁의 핵심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산업 차원에서 일찍이 마샬(Marshall, 1920)은 특정 지역에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모임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70-1980년대에 직면했던 실업과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를 구성했던 지역들은 오히려 번영을 누린 현상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들을 나오게 한 기초가 되었다. 마샬이 주장했던 특정 지역에 형성된 산업지구의 격차들을 이탈리아 사례에 적용시켜 연구했던 Piore and Sabel(1984), 헐리우드, 실리콘 벨리, 오렌지 카운티 등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했던 Hall and Markusen (1985), 역시 실리콘 벨리와 Route 128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한 Saxenian (1996) 등은 이와 같은 소위 산업지구 이론(Industrial District Model)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로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산업 차원에서 지역이 부각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지역들의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 지역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개별산업의 입지조건, 지역의 인프라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와 지역정책 등에 의해 지역의 고용성장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Dunn, Jr., 1960; Barff et al., 1988; Andrikopoulos et al, 1990; Traistaru and Wolff, 2002).

한국에서도 지역과 고용에 대한 관심은 지방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고용을 증진시켜야 할 정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실증적인 분

석 및 접근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역별 고용자료는 고용에 관한 각 지역들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할 수 자료로서 매우 유용한 지표이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그 지역들의 고용상황을 기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각 지역의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고용지표 역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 보다는 국가 단위에서 비교 및 측정할 수 있는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별 고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변화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고용자료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성과와 한계들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서 지역 고용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가진 한계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별 고용자료(1999-2006년)를 변화할당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각 지역들의 고용성장 정도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뒤, 고용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 고용의 성장에 대한 실증연구들의 흐름은 해외의 경우, 지역 내의 고용성장에 대해 해당 지역 내의 어떤 산업들이 고용성장을 이끌어 왔는지를 분석하던 것에서 그 영역을 넓혀 인접지역 간의 비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비교 및 일반적인 성장요인의 탐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많은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그 흐름별로 특징적인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내의 고용성장에 대해서 해당 지역 내의 어떤 산업들이 고용성장을 이끌어 왔는지를 분석한 연구로서는 Andrikopoulos et al(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1년-1981년까지의 기간 동안 캐나다 퀘벡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캐나다 전

국의 고용성장률에 비해 이 지역의 고용성장률이 미치지 못했던 이유로서 제조업 분야, 특히 섬유 및 의류산업에서의 부진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고용의 성장에 대해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비교 및 고용성장의 일반적 요인 탐색을 수행한 연구로서는 미국의 1969년-1985년의 각 주별 고용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Gracia-Mila and McGuire (1993)의 연구와 유럽 국가들 중 체제 변화를 겪었던 전환국가들에 속하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의 고용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Traistaru and Wolff (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중 미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자의 연구에서는 각 지역 간의 고용격차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각 지역의 기존 산업구조에 기반한 산업특화적 요인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유럽지역의 전환국가들에 대한 후자의 연구에서는 1990년-1999년까지의 고용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산업특화적인 요인보다는 해당지역의 인프라와 정책, 입지조건 등과 같은 지역특수적 요인이 보다 지역 간 고용격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혀 주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고용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간 비교 및 전반적인 성장요인을 탐색하는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도 지역 고용의 성장자료를 활용한 분석자체는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한 지역 내의 산업구조와 고용현황을 기술하기 위해 활용됨으로써, 다른 지역들과 그 성과 자체를 비교할만한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연구 대상이 지역 내 고용성장을 대상으로 하든 또는 지역 간 고용의 성장변화를 다루든 간에 관련 연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해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할당분석 기법(Shift-Share Analysis)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여타의 분석기법들보다 단순하고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연구에서 최초로 이러한 기법으로 지역 고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병선(197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3년-1972년의 기간 동안의 대구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료에 대한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대구지역의 공업성장을 분석하였고, 대구 지역의 제조업의 성장이 대구지역의 고용성장을 추동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경제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선별된 하나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성장을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일종의

경향을 이루었다.

근래에는 이정록(2002), 김학훈(2004), 정순관(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이정록(2002)은 전남 여천 산단을 사례로 하여 1987년에서 1996년까지 기간 동안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1987년 이후 제조업과 건설업이 이 지역의 고용성장을 이끌어 왔음을 제시하였다. 김학훈(2004)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변화할당분석기법이 발전된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보완된 기법을 통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1985년과 2000년 자료를 대상으로 산업구조와 고용상황을 분석하여, 광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이 기간 동안의 고용성장을 추동해 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순관(2006)은 근래에 들어 행정학계에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드문 사례였다. 그는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또한 좌우되고 있으며, 개별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이 지역의 고용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해당지역이 분석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 변화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비교 및 일반적 고용성장요인을 탐색하는 실증 분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비교 및 일반적 고용성장 요인을 탐색한 실증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변필성 외(2005)는 지역특수적 요인에 해당하는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실제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화할당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공간계량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1년-2000년 사이의 기간의 고용자료에 대한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지역특수적 요소들을 추출하였고, 2000년대 초반(2000년-2003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각각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제조업 부분의 지역특수적 요인이 인구성장에 기여하였고, 건설업 부분의 지역특수는 오히려 인구성장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과 연계되는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이들 산업부문이 아닌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특수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9개 산업부문만이 갖는 지역특수적 요인들만을 변수로 설정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 각 산업부문 중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지역 간 비교 및 일반적 고용성장 요인을 탐색한 실증연구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병유(2006)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1994년-2004년까지 기간의 고용자료에 대하여 통상적인 변화할당분석에서 지역의 순수효과를 추출할 수 있는 개량된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지역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고용성장을 추동하는지를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이 입지적으로 고유하게 갖고 있는 지역특수적 요인이 지역들의 고용성장에 있어 산업특화 요인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도 분석단위가 광역시와 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 지방화 시대와 관련한 시기별 구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변화할당분석 기법의 특성 상, 그 시기에 해당하는 분석의 잠정적 성격으로 인해 보다 최신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불가피하다.

## 2.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지역고용지표 활용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고용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서 실업률, 고용률과 같은 대표적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경제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지역들의 고용현황을 비교 및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실제 실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업률은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수」로 정의된다. 여기서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인 생산가

능인구에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제외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에는 불황이 지속되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실망실업자들이 포함되어 사실상 실업률 수치에는 이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즉,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업률 수치는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비경제활동인구(NLP)에도 포함된 실업자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률의 개념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5세 이상인구를 분모로 하여 그에 대한 취업자 비중을 계산하는 고용률이 대체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김기호·장동구, 2005).

그러나 고용률 또한 전체적인 인력활용을 나타내는 척도 차원에서는 실업률보다 유용성을 갖지만, 지역별 고용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전체 인구를 분모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변화가 매우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실업률과 고용률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최영준·손창남(2007)의 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라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전반적인 수치들이 악화되었다가 개선된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지역간 격차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림 1>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의 기본개념

취업자(E)	실업자(U)
경제활동인구(LP)	비경제활동인구(NLP)
15세 이상인구(P)	
실업자(U)/경제활동인구(LP)=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E)/15세 이상인구(P)

### Ⅲ.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의 특성과 성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변화할당분석은 일정 두 시점 사이에서 일어난 지역의 어떤 산업분야에 대한 고용성장의 정도가 어떠한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래 변화할당분석의 기본적인 논리는 동일한 두 시점 사이에서 동일한 산업분야들에 대한 특정지역과 전국의 성장 정도를 비교하여 특정지역과 전국의 성장정도 차이를 그 지역의 전국적으로 성장한 산업에 특화된 산업특화적 요인과 그 외 산업특화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국의 평균성장 이상을 달성한 정도에 기인하는 부분을 지역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Dunn Jr., 1960).

변화할당분석은 그 분석방법의 단순성과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 왔다(Houston, 1967). 변필성 외(2005)도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자료의 성장 상황에 대해 그 격차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실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고 표준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변화할당분석은 지역경제분석을 위한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변필성 외, 2005; 전병유, 2006). 이러한 장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각 하위조직의 생산성, 투자, 기업의 이동, 인구, 농업산출물, 연료소비량, 범죄율 등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 이 방법들이 활용된 이유이기도 했다.<sup>1)</sup>

변화할당분석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거나 개량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Esteban(1972)이 이전까지의 방식을 비판하며 제안한 방식과 이후 Esteban(2000)의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을 활용하며 보여주었던 일련의 방식, 그리고 Barff and Knight(1988)가 제안한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을 종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종합된 방법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된다.

첫째, Esteban(1972)이 제안한 방식<sup>2)</sup>을 사용하게 될 경우, 지역별 고용격차를 이

1) 변화할당분석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는 Arcelus(1984)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루는 산업특화요인과 지역요인만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분석이 갖는 약점 중의 하나인 산업특화요인과 지역요인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자원배분요인을 포괄적인 지역요인에서 따로 분리해냄으로써 순수한 지역특수요인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둘째, Barff and Knight(1988)가 제안한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을 보완하게 되면, 각 연도별 자료들에 대한 개별적 변화할당을 모두 실시하여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시작년도와 끝년도 자료로써만 고용성장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하는 단순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Esteban(2000)의 실제 활용방식을 참조하게 되면, 개별 지역의 고용성장과 관련한 특성 외에도, 전반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고용성장을 이끌어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을 통해 구하고자 각 요인들을 구하기 위한 산식과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 : 전국에서의 고용자 수

$E_j$ :  $j$ 지역에서의 고용자 수

$E_i$ :  $i$ 산업의 고용자 수

$E_{ij}$ :  $j$ 지역에서  $i$ 산업의 고용자 수

$S_{i,t} = E_{i,t} / E_t$ : 시작년도  $t$ 시점에서  $i$ 산업에서의 고용비중

$S_{ij,t} = E_{ij,t} / E_{j,t}$ : 시작년도  $t$ 시점에서  $j$ 지역  $i$ 산업에서의 고용비중

$G = \frac{E_{t+1} - E_t}{E_t}$ : 두 시점 간 전국수준의 고용증가율

$G_j = \frac{E_{j,t+1} - E_{j,t}}{E_{j,t}}$ : 두 시점 간  $j$  지역의 고용증가율

$G_i = \frac{E_{i,t+1} - E_{i,t}}{E_{i,t}}$ : 두 시점 간  $i$  산업의 고용증가율

- 
- 2) 일반적인 산업특화요인과 지역요인으로 구분한 변화할당분석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수한 입지적 요인에 기인하는 지역특수적 요인과 앞에서 언급한 산업특화요인과 지역특수요인의 공분산에 해당하는 자원배분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G_{ij} = \frac{E_{ii,t+1} - E_{ii,t}}{E_{ij,t}} : \text{「}j\text{」 지역의 「}i\text{」 산업에 대한 두 시점 간 개별 고용증가율}$$

이라고 할 때, 전국 평균의 고용증가율을 압도하게 되는 지역  $j$ 의 고용증가율은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 산업특화적 요인(industrial mix factor), 구조적인 산업특화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의 고유한 인프라와 입지조건 및 정책 등에 의한 지역특수 요인(region-specific factor), 이들 산업특화와 지역특수의 공분산적 개념으로서 이들 간에 할당된 자원들이 고를수록, 즉 그 지역이 기존의 산업특화와 산업특화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특수적 요인에서 모두 경쟁력을 가질수록 커지게 되는 자원배분적 요인(allocative factor)의 결합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의와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Traistaru and Wolff, 2002).

$U_j$ :  $j$ 지역의 산업특화요인(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지역의 특화정도에 기인)

$\Pi_j$ :  $j$ 지역의 지역특수요인(해당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요인에 기인)

$A_j$ :  $j$ 지역의 자원배분적 요인(해당 지역이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는 정도에 기인)

$$\textcircled{1} G_j - G = U_j + \Pi_j + A_j :$$

두 시점 간  $j$  지역과 전국 평균의 고용증가율 격차=

$j$  지역 산업특화요인+ $j$  지역 지역특수요인+ $j$  지역의 자원배분요인

이때, 1)  $j$  지역에서 개별산업의 고용증가율이 전국의 고용증가율과 동일하다.

2)  $j$  지역의 고용과 관련한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와 동일하다.

고 가정할 때, 각각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circled{2} \text{ 산업특화 요인 : } U_j = \sum_i (S_{ij} - S_i) G_i$$

$$\textcircled{3} \text{ 지역특수 요인 : } \Pi_j = \sum_i S_i (G_{ij} - G_i)$$

$$\textcircled{4} \text{ 자원배분 요인: } A_j = \sum_i (S_{ij} - S_i)(G_{ij} - G_i)$$

으로 나타낼 수 있어 결국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된다.

$$\textcircled{5} G_j - G = \sum_i (S_{ij} - S_i)G_i + \sum_i S_i(G_{ij} - G_i) + \sum_i (S_{ij} - S_i)(G_{ij} - G_i)$$

한편, 앞에서 언급한 지역별 고용격차에 대한 주요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인들이 고용증가율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각 개별요인들의 분산값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⑥ 분산식:

$$\text{Var}(G_j - G) = \text{Var}(U_j) + \text{Var}(\Pi_j) + \text{Var}(A_j) + 2[\text{Cov}(U_j, \Pi_j) + \text{Cov}(U_j, A_j) + \text{Cov}(\Pi_j, A_j)]$$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9년에서 2006년까지이다. 이 시기를 선정한 것은 커다란 단절적 상황이었던 경제적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으로 시간을 제한하여, 지역별 고용성장을 추동했던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변화할당 분석이 기본적으로 두 시점 간의 변화만을 분석하는 단순성을 보완하기 위해 동태적변화할당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고, 한국의 지방선거가 각각 2002년과 2006년에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1999년-2002년, 2002년-2006년 간의 고용성장에 대한 시기별 변화할당 분석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1년 단위로 통계청에 의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된 것이며,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된다. 이 자료에서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해당산업, 종사자수

등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재지와 해당산업, 종사자 수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변화할당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변화할당분석은 그 특성 상 각 지역들의 하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산업별 구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산업별 구분을 너무 세분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가 전무할 경우, 분모가 0이 되어 관련 요인들 값이 무한대가 나올 수 있으며, 너무 포괄적으로 분류하거나 기존의 산업분류라도 고성장 영역과 저성장 영역이 혼합될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록 1>에 제시된 OECD(2000) 기준에 따라서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 공업, 전자산업으로 세분화했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산업구분으로 구성하였다<sup>3)</sup>.

## IV.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 1. 분석결과

#### 1) 1999년-2006년의 지역별 고용에 대한 변화할당분석

다음의 <표 1>은 지역별 고용격차에 대한 변화할당분석을 1999년-2006년의 범위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전국적으로 고용수준은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이러한 전국 평균의 고용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

3) 선행연구였던 전병유(2006) 또한 이와 같은 OECD(2000) 기준을 수용하여 분석하였다.

&lt;표 1&gt; 지역 간 고용격차에 대한 변화할당분석(1999년-2006년)

(단위: 천명, %, %p)

	취업자수		총고용 변동	전국 평균변동	산업특 화변동	지역요인		7년간 증가율	고용증 가율격차	산업 특화 요인	지역 특수 요인	자원 배분 요인	비중		
	1999	2006				지역 특수 변동	자원 배분 변동						1999	2006	
전국	12,920	15,436	2,515	2,515				19.5							
서울특별시	3,368	3,895	527	656	29	-291	134	15.6	-3.8	0.9	-8.6	4.0	26.1	25.2	
부산광역시	1,045	1,147	102	203	-17	-72	-13	9.8	-9.7	-1.6	-6.9	-1.2	8.1	7.4	
대구광역시	657	721	64	128	-11	-36	-18	9.7	-9.8	-1.6	-5.4	-2.7	5.1	4.7	
인천광역시	642	745	103	125	-4	-1	-18	16.1	-3.4	-0.6	-0.1	-2.7	5.0	4.8	
광주광역시	368	439	72	72	9	1	-10	19.5	0.0	2.5	0.2	-2.6	2.8	2.8	
대전광역시	356	413	57	69	8	-13	-7	16.0	-3.5	2.2	-3.6	-2.1	2.8	2.7	
울산광역시	311	389	79	60	4	43	-29	25.3	5.9	1.3	13.9	-9.3	2.4	2.5	
경기도	2,217	3,165	948	432	7	558	-49	42.7	23.3	0.3	25.2	-2.2	17.2	20.5	
강원도	396	441	45	77	0	-37	4	11.3	-8.2	0.1	-9.4	1.1	3.1	2.9	
충청북도	395	463	68	77	0	-9	0	17.2	-2.3	-0.1	-2.3	0.1	3.1	3.0	
충청남도	475	605	130	92	-2	27	13	27.4	7.9	-0.4	5.6	2.7	3.7	3.9	
전라북도	459	487	28	89	-1	-58	-1	6.2	-13.3	-0.3	-12.7	-0.3	3.5	3.2	
전라남도	507	508	2	99	-12	-73	-12	0.4	-19.1	-2.4	-14.5	-2.3	3.9	3.3	
경상북도	715	815	101	139	-5	-44	10	14.1	-5.4	-0.7	-6.1	1.4	5.5	5.3	
경상남도	862	1,025	163	168	-3	-20	18	18.9	-0.6	-0.4	-2.3	2.1	6.7	6.6	
제주도	148	177	29	29	-2	7	-5	19.2	-0.2	-1.6	4.8	-3.4	1.1	1.1	

각 지역의 지난 7년간 고용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같이 최고 42.7%까지 증가한 경우와 전라남도과 같이 0.4% 증가에 그친 경우가 공존하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의 고용증가율이 19.5%였는데 이를 넘어선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4곳이었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고용격차를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산업특화 요인, 지역특수 요인, 자원배분 요인으로 분해한 것을 <표 1>을 통해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이들 3가지 요인들 중 지역특수 요인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그 구성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증가율은 0.2%p 못 미치지만, 지역특수적 요인은 4.8%p에 달하여 지역특수적 요인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대전의 경우, 전국에 비해 고용증가율은 3.5% 못 미치고 지역특수적 요

인 또한 -3.6%p로 낮지만, 산업특화적 요인이 2.2%p로 나타나 제주도와는 달리 산업 특화적 요인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비중 및 고용증가율

(단위: %)

10개 산업군	경기					
	$S_{ij}$	$S_i$	$G_{ij}$	$G_i$	$S_{ij}/S_i$	$G_{ij}/G_i$
농림어광업	0.2	0.6	18.1	-39.4	0.3	-0.46
경공업	10.2	9.2	8.7	-14.2	1.1	-0.61
중화학 공업	15.7	11.7	41.9	20.0	1.3	2.10
전자산업	8.6	3.7	33.4	28.3	2.3	1.1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	0.4	-0.2	17.9	1.0	-0.01
건설업	3.2	5.0	94.8	29.6	0.6	3.20
생산서비스	10.2	11.4	58.9	50.3	0.9	1.17
유통서비스	19.7	24.8	41.2	8.7	0.8	4.74
개인서비스	16.5	17.1	40.6	17.7	1.0	2.30
사회서비스	15.2	16.0	55.9	32.4	1.0	1.72
	울산					
	$S_{ij}$	$S_i$	$G_{ij}$	$G_i$	$S_{ij}/S_i$	$G_{ij}/G_i$
농림어광업	0.2	0.6	-45.1	-39.4	0.3	1.14
경공업	3.4	9.2	16.8	-14.2	0.4	-1.18
중화학 공업	37.3	11.7	5.4	20.0	3.2	0.27
전자산업	2.7	3.7	0.2	28.3	0.7	0.0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	0.4	-10.2	17.9	1.3	-0.57
건설업	3.3	5.0	132.5	29.6	0.7	4.48
생산서비스	7.6	11.4	77.1	50.3	0.7	1.53
유통서비스	17.9	24.8	17.0	8.7	0.7	1.96
개인서비스	14.2	17.1	27.1	17.7	0.8	1.53
사회서비스	12.8	16.0	44.7	32.4	0.8	1.38
	대전					
	$S_{ij}$	$S_i$	$G_{ij}$	$G_i$	$S_{ij}/S_i$	$G_{ij}/G_i$
농림어광업	0.0	0.6	65.6	-39.4	0.1	-1.67
경공업	7.3	9.2	-32.9	-14.2	0.8	2.31
중화학 공업	5.8	11.7	15.1	20.0	0.5	0.76
전자산업	1.0	3.7	73.5	28.3	0.3	2.6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	0.4	14.8	17.9	1.3	0.82
건설업	4.6	5.0	30.9	29.6	0.9	1.04
생산서비스	15.7	11.4	32.5	50.3	1.4	0.65
유통서비스	26.8	24.8	5.3	8.7	1.1	0.61
개인서비스	19.0	17.1	8.7	17.7	1.1	0.49
사회서비스	19.2	16.0	37.0	32.4	1.2	1.14

위의 <표 2>는 분석대상인 16개의 시도 지역들 중 산업특화, 지역특수, 자원배분의 요인들이 특징 있게 나타난 3개의 지역들에 대해 10개의 산업부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고용이 증가되어 왔는지를 지역별 산업구조와 고용증가율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고용증가율이 높았으며, 산업특화와 지역특수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기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산업특화와 지역특수를 보였지만 자원배분 요인은 가장 낮았던 울산 광역시, 높은 산업특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역특수로 인해 제한된 고용성장을 보인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살펴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산업특화 요인은  $U_i = \sum_j (S_{ij} - S_i) G_j$ 와 같이 계산되므로, 산업특화적 요인이 높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의 고용증가율  $G_j$ 가 높은 산업분야에서 본래의 해당지역의 개별산업 고용비중이 해당산업에 대한 전국의 고용비중을 압도할 것이 요구된다( $S_{ij} > S_i$  즉,  $S_{ij}/S_i > 1$ ).<sup>4)</sup>

또한 지역특수적 요인은  $\Pi_i = \sum_j S_i (G_{ij} - G_j)$ 으로서 해당산업에 대한 개별지역의 고용증가율이 해당산업의 전국 고용증가율을 압도하고( $G_{ij} > G_j$  즉,  $G_{ij}/G_j > 1$ ), 전국 평균의 산업별 고용비중  $S_i$ 가 높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자원배분적 요인은 이들 요인들의 공분산 개념으로서 해당지역의 특화된 산업부문에 대한 고용증가율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특화된 구조임에도 다른 산업 부문에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자원배분적 요인은 감소하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부문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전자산업,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 모두 본래의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과 같거나 높게 나타나( $S_{ij}/S_i = 1$  또는  $S_{ij}/S_i > 1$ ) 산업특화 요인이 0.3%p로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고용증가를 보다 압도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25.2%p로 나타난 지역특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특화된 산업부문이었던 중화학 공업 부문과 전자산업의 경우, 고용증가율이 각각의 전국평균인 20.0%와 28.3%를 압도하는 41.9%와 33.4%로 나타나 산업특화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

4) 따라서 <표 2>에 제시된  $LQ = S_{ij}/S_i$  값이 1 이상이면 산업특화가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

특수적인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래 산업특화적인 부문이 아니었던 생산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서 전국 고용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강하게 지역특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산업부문은 건설업과 유통서비스 부문이었는데 이들은 본래 특화된 산업부문이 아니었음에도 지난 7년간 각각 94.8%와 41.2%의 고용증가율을 보여 해당산업의 전국평균 고용증가율인 29.6%와 8.7%를 훨씬 압도하였다. 지역특수가 강한 산업부문과 산업특화가 강한 산업부문의 불일치로 인해 자원배분적 요인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2%p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중화학 공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문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특화적인 요인을 갖고 있지만, 건설업, 생산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다른 지역을 훨씬 압도하는 지역특수적 요인이 보다 강하게 고용증가율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역 또한 지역특수적 산업부문과 산업특화적 산업부문의 불일치로 자원배분적 요인은 -9.3%p로 다른 16개 시도 지역 중 가장 낮은 자원배분 요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울산의 경우, 산업특화적 요인은 1.3%p, 지역특수적 요인은 13.9%p를 기록하였다.

한편 대전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 사업부문에서 모두 전국의 평균적인 고용비중을 압도할 정도로 높아서 산업특화 요인 수치 2.2%p로 산업특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3.6%p로 낮게 나타난 지역특수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국의 평균 고용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전자산업과 사회서비스 등에서 지역특수적인 고용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고용증가율은 산업특화적인 요인을 강하게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낮은 지역특수로 인해 산업특화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전 또한 산업특화적인 강점을 지역특수적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감점을 당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어 자원배분적 요인에서도 -2.1%p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sup>5)</sup>

5) 앞의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서울의 경우, 전국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과 생산서비스에서 강한 산업특화적인 구조를 보여 전반적인 산업특화 요인 수치가 0.9%로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특화 요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특수적 요인의 경우에는 -8.6%p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생산서비스와 개인서비스,



## 2) 시기별 변화할당분석과 동태적 변화할당분석

앞에서 살펴본 1999년-2006년간의 변화할당분석은 관련 시점이 1999년과 2006년의 두 시점뿐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의 시기별 변화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을 기준으로 앞에서 시행하였던 변화할당분석을 보다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 즉, 1999년-2002년을 전반기로, 2002년-2006년을 후반기로 하여 이들에 대한 변화할당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지역들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고용증가율 격차에 영향을 미친 산업특화와 지역특수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작성하였다.<sup>6)</sup> 아울러 1년 단위의 변화할당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들에 대한 연평균 분석인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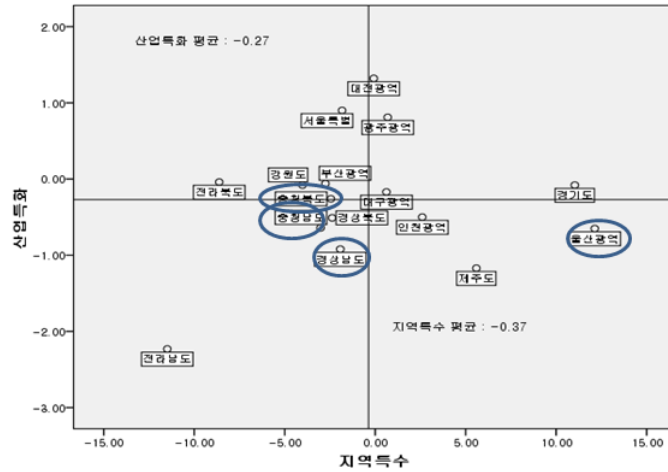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반기와 후반기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 그리고 <표 3>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고용증가율이 전반기에 해당하는 1999년-2002년의 경우, 13.06%였던 반면, 후반기에 해당하는 2002년-2006년의 경우 5.66%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할당분석에서 지역의 고용증가율을 견인하는 유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산업특화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 중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특수 요인이 전반기(지역특수 평균: -0.37)에 비해 후반기(지역특수 평균: -1.20)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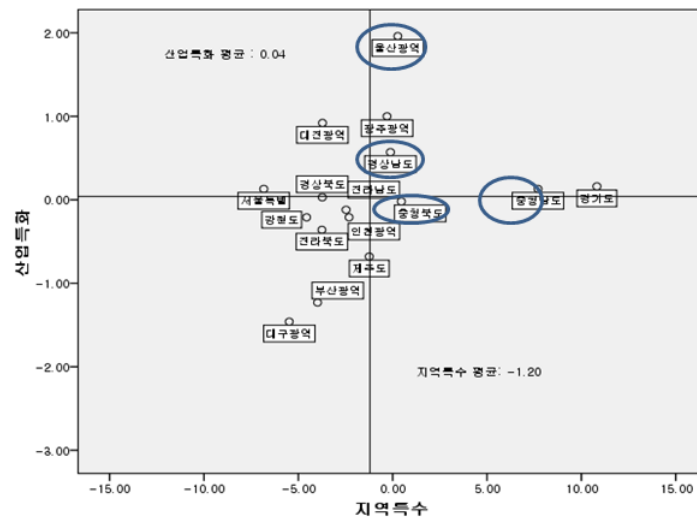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의 산업부문들에서는 오히려 지역특수적 요인이 그나마 있는 산업특화적 요인을 감소시킬 정도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 6) 여기서 고용증가율 격차에 영향을 미친 자원배분 요인을 제외한 이유는 자원배분 요인은 본래 고전적인 변화할당분석에서 산업특화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요인에서 순수한 지역효과를 추출하기 위해 분리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시기별 분석: 1999년-2002년간의 지역특수와 산업특화 간의 산점도



<그림 3> 시기별 분석: 2002년-2006년간의 지역특수와 산업특화 간의 산점도



<표 3> 지역 간 고용격차에 대한 전반기 변화할당분석(1999년-2002년)  
(단위: 천명, %, %p)

	취업자수		총고용 변동	전국 평균변동	산업특 화변동	지역요인		3년간 증가율	고용 증가율 격차	산업 특화 요인	지역 특수 요인	자원 배분 요인	비중	
	1999	2002				지역 특수 변동	자원 배분 변동						1999	2002
전국	12,920	14,608	1,688	1,688				13.06					26.1	26.0
서울특별시	3,368	3,805	438	440	30	-61	29	13.00	-0.06	0.90	-1.83	0.86	8.1	7.8
부산광역시	1,045	1,146	100	137	-1	-29	-7	9.61	-3.46	-0.06	-2.75	-0.64	5.1	5.1
대구광역시	657	739	81	86	-1	4	-8	12.33	-0.73	-0.17	0.62	-1.18	5.0	4.9
인천광역시	642	723	81	84	-3	17	-16	12.63	-0.43	-0.50	2.60	-2.54	2.8	2.9
광주광역시	368	416	49	48	3	3	-5	13.23	0.17	0.81	0.69	-1.32	2.8	2.8
대전광역시	356	404	48	47	5	0	-3	13.37	0.30	1.32	-0.08	-0.94	2.4	2.5
울산광역시	311	371	60	41	-2	38	-16	19.27	6.20	-0.65	12.13	-5.29	17.2	18.6
경기도	2,217	2,721	504	290	-2	245	-29	22.71	9.65	-0.08	11.03	-1.31	3.1	3.0
강원도	396	431	35	52	0	-16	0	8.88	-4.18	-0.08	-4.02	-0.08	3.1	3.0
충청북도	395	435	40	52	-1	-10	-1	10.01	-3.05	-0.26	-2.45	-0.34	3.7	3.6
충청남도	475	526	51	62	-3	-14	6	10.69	-2.37	-0.64	-3.02	1.29	3.5	3.3
전라북도	459	478	19	60	0	-40	-1	4.23	-8.83	-0.04	-8.62	-0.17	3.9	3.4
전라남도	507	496	-11	66	-11	-58	-7	-2.09	-15.16	-2.23	-11.49	-1.44	5.5	5.4
경상북도	715	790	75	93	-4	-17	2	10.49	-2.58	-0.51	-2.38	0.32	6.7	6.5
경상남도	862	955	93	113	-8	-17	5	10.79	-2.28	-0.92	-1.93	0.57	1.1	1.2
제주도	148	174	26	19	-2	8	0	17.33	4.27	-1.17	5.59	-0.15	0.0	0.0

<표 4> 지역 간 고용격차에 대한 후반기 변화할당분석(2002년-2006년)  
(단위: 천명, %, %p)

	취업자수		총고용 변동	전국 평균변동	산업특 화변동	지역요인		3년간 증가율	고용 증가율 격차	산업 특화 요인	지역 특수 요인	자원 배분 요인	비중	
	2002	2006				지역 특수 변동	자원 배분 변동						2002	2006
전국	14,608	15,436	827	827				5.66					26.0	25.2
서울특별시	3,805	3,895	89	216	5	-260	128	2.34	-3.32	0.13	-6.83	3.37	7.8	7.4
부산광역시	1,146	1,147	2	65	-14	-46	-4	0.14	-5.52	-1.23	-3.98	-0.31	5.1	4.7
대구광역시	739	721	-17	42	-11	-40	-8	-2.34	-8.00	-1.46	-5.48	-1.07	4.9	4.8
인천광역시	723	745	22	41	-1	-17	-1	3.05	-2.62	-0.21	-2.31	-0.10	2.9	2.8
광주광역시	416	439	23	24	4	-1	-3	5.53	-0.13	1.00	-0.30	-0.83	2.8	2.7
대전광역시	404	413	9	23	4	-15	-2	2.30	-3.37	0.92	-3.72	-0.57	2.5	2.5
울산광역시	371	389	19	21	7	1	-10	5.10	-0.56	1.96	0.27	-2.79	18.6	20.5
경기도	2,721	3,165	444	154	4	294	-9	16.32	10.66	0.16	10.82	-0.32	3.0	2.9
강원도	431	441	9	24	-1	-20	6	2.19	-3.47	-0.21	-4.56	1.30	3.0	3.0
충청북도	435	463	28	25	0	2	2	6.51	0.85	-0.02	0.46	0.41	3.6	3.9
충청남도	526	605	79	30	1	40	8	15.06	9.39	0.13	7.70	1.57	3.3	3.2
전라북도	478	487	9	27	-2	-18	1	1.85	-3.81	-0.36	-3.75	0.30	3.4	3.3
전라남도	496	508	12	28	-1	-12	-3	2.50	-3.16	-0.12	-2.47	-0.58	5.4	5.3
경상북도	790	815	26	45	0	-29	10	3.25	-2.41	0.03	-3.73	1.28	6.5	6.6
경상남도	955	1,025	70	54	5	-1	12	7.32	1.66	0.57	-0.12	1.21	1.2	1.1
제주도	174	177	3	10	-1	-2	-4	1.63	-4.03	-0.68	-1.24	-2.12	0.0	0.0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전반기와 후반기의 고용상황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반기(1999년-2002년)의 경우, 울산광역시,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으로 높은 고용증가율을 나타냈고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낮은 고용증가율을 나타냈다<sup>7)</sup>. 반면, 후반기(2002년-2006년)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했고,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낮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sup>8)</sup>

<표 3>에서 제시된 전반기의 지역별 각 요인들 수치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는 주로 지역특수 요인에 의해 고용증가를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산업특화적인 요인이 주로 고용증가를 이루어 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전반기에 낮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던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모두 지역특수적 요인이 낮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각 요인의 수치는 다르지만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과 관련한 1999년-2002년의 결과는 앞에서 제시하였던 <표 1>의 1999년-2006년의 양상과 유사한 것이다.

한편,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후반기인 2002년-2006년의 결과는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한 지역들 중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주로 지역특수 요인에 의해 고용증가가 일어났으며,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광주광역시는 주로 산업특화 요인에 의해 고용증가가 일어났다. 반면에 강원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낮은 지역특수적 요인에 의해 그리고 제주도는 악화된 지역특수적 요인과 자원배분 요인에 의해 고용증가 또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와 <그림 3>은 이러한 차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반기에 산업특화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지역특수를 통해 고용을 추동해 왔던 인천광역시, 제주도가 모두 타지역들에 비해 낮아졌고, 지역특수는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특화를 보였던 전라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가 후반기에는 두 요인 모두 낮게 나타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기에 산업특화

7) 전반기 위의 상위 5개 지역은 전국 고용평균증가율인 13.06%를 넘어섰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이를 넘지 못하였다.

8) 후반기 위의 상위 6개 지역은 전국 평균 고용증가율인 5.66%를 넘어섰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를 넘지 못하였다.

와 지역특수가 모두 높았던 대구광역시도 후반기에는 산업특화와 지역특수 모두가 낮아져 <표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지역들은 충청남도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과 충청북도였다. 우선 충청남도과 경상남도는 전반기에 산업특화와 지역특수 모두가 낮았으나 후반기에는 이들 요인이 모두 높아져 경기도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전반기에는 지역특수가 높았으나 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고용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특화로 인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덜 악화되었다. 또한 충청북도는 전반기에는 산업특화가 상대적으로 강했으나 후반기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지역특수 요인이 강화되면서 상위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추가적인 동태적 변화할당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표 5>는 앞에서 제시한 1999년-2006년의 지역별 고용자료에 대한 1999년과 2006년의 두 시점 간의 변화할당분석, 즉, 정태적 변화할당분석을 수행을 통해 얻은 고용증가율 격차의 분해된 요인들의 수치와 1999년에서 2006년의 기간 동안 매 1년 단위의 개별 연도마다 연속적인 변화할당분석을 수행한 이후, 이에 대한 연도별 평균을 통해 얻은 즉,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분해된 요인들의 수치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에서 제시된 정태적 변화할당분석 결과와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이 연도별 평균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 수치의 크기 차이를 제외한다면, 그 외의 고용증가율 격차의 방향과 이를 이끌어내는 산업특화, 지역특수, 자원배분의 요인들의 구성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자원배분의 요인이 크게 나타났고, 부산과 대구의 지역특수 요인이 매우 취약하며, 인천은 지역특수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와 대전은 모두 산업특화된 지역이지만 지역특수 또한 높은 광주에 비해 대전은 지역특수의 요인이 매우 취약하며, 경기, 울산, 제주의 경우 지역특수 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분석의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정태적 변화할당분석 결과와 동태적 변화할당분석 결과(1999년-2006년)  
(단위: %p)

	정태적 변화할당분석				동태적 변화할당분석			
	고용증가 율 격차	산업 특화 요인	지역 특수 요인	자원 배분 요인	고용증가 율 격차	산업 특화 요인	지역 특수 요인	자원 배분 요인
서울특별시	-3.8	0.9	-8.6	4.0	-0.45	0.16	-1.22	0.61
부산광역시	-9.7	-1.6	-6.9	-1.2	-1.22	-0.16	-0.92	-0.14
대구광역시	-9.8	-1.6	-5.4	-2.7	-1.22	-0.20	-0.69	-0.33
인천광역시	-3.4	-0.6	-0.1	-2.7	-0.42	-0.08	-0.01	-0.33
광주광역시	0.0	2.5	0.2	-2.6	0.01	0.25	0.11	-0.34
대전광역시	-3.5	2.2	-3.6	-2.1	-0.41	0.30	-0.49	-0.21
울산광역시	5.9	1.3	13.9	-9.3	0.73	0.22	1.51	-1.01
경기도	23.3	0.3	25.2	-2.2	2.65	-0.01	2.86	-0.20
강원도	-8.2	0.1	-9.4	1.1	-1.04	-0.07	-1.19	0.21
충청북도	-2.3	-0.1	-2.3	0.1	-0.28	-0.01	-0.28	0.01
충청남도	7.9	-0.4	5.6	2.7	0.94	-0.12	0.66	0.40
전라북도	-13.3	-0.3	-12.7	-0.3	-1.72	-0.08	-1.67	0.04
전라남도	-19.1	-2.4	-14.5	-2.3	-2.49	-0.32	-1.87	-0.30
경상북도	-5.4	-0.7	-6.1	1.4	-0.65	-0.06	-0.73	0.14
경상남도	-0.6	-0.4	-2.3	2.1	-0.07	-0.05	-0.28	0.26
제주도	-0.2	-1.6	4.8	-3.4	0.01	-0.33	0.64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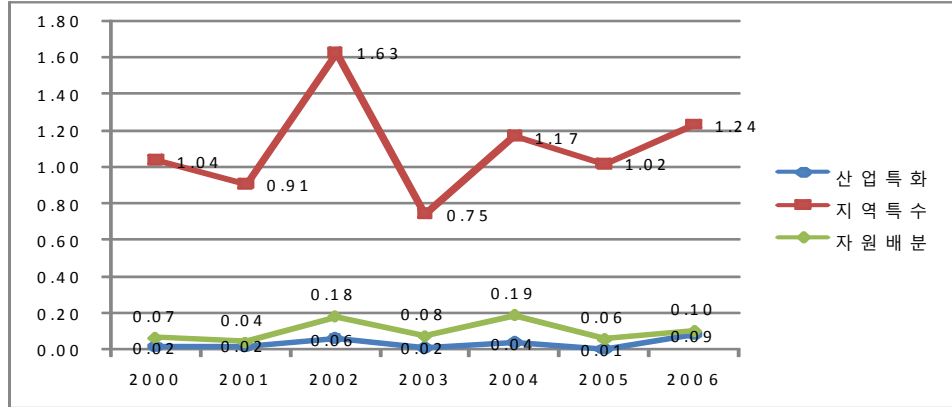
### 3) 각 요인들의 분산값을 통한 기여도 비교

이제까지 각 지역들의 고용격차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개별지역마다 산업특화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 그리고 자원배분의 요인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이하게 결합된 요인들 중에 각 지역별 고용격차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지역특수 요인들의 수치가 크게 나타나 대략적으로 지역특수 요인이 주요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연도별로 그 양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요인들의 분산값을 추출하여 그것이 고용증가율의 분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즉, 1999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해당 연도별로 지역들의 고용증가율 분

산에 대해 변화할당분석에서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특화, 지역특수, 자원배분 요인들의 개별적인 분산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계산하여 이 시기동안 고용증가의 변화에서 각 요인들의 변화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흐름을 측정하였다.

<그림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특수 요인의 분산이 다른 두 요인인 산업특화 요인과 자원배분 요인 분산보다 지역들의 고용증가율 분산에 압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특화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낮았고 그 변화 또한 가장 적었고, 자원배분 요인의 분산 기여도는 중간 정도의 크기와 변화를 지역특수 요인의 분산 기여도의 크기와 변화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2년을 기점으로 각 요인들의 분산기여도는 모두 증가하였다가 하락하였으며 이후 2003년부터는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산업정책이 불균형 산업발전 전략에 바탕하고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일견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할만한 산업군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지역의 산업들이 안정된 고용성장을 이끌지 못할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특수 요인의 분산 기여도가 매우 압도적이고 또한 극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전국적인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성장의 효과보다는 지역의 입지적 조건이나 지방정부의 정책, 인프라 등이 포함되는 지역특수적 요인에 의해 고용성장이 큰 영향을 받아 왔음을 시사한다.

&lt;그림 5&gt; 각 요인들의 분산을 통한 기여도 비교



#### 4) 분석결과의 종합

이제까지 정태적 변화할당분석과 동태적 변화할당분석 그리고 시기별 변화할당분석과 고용성장 요인들의 고용증가율에 대한 분산 기여도 비교를 통해 각 지역의 고용증가의 특성과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태적 변화할당분석 결과와 동태적 변화할당분석 결과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9년-2006년의 기간 동안 산업특화와 지역특수적 요인을 고유하게 갖고 있는 지역들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은 다른 여타의 지역들에 비해 지역특수요인과 산업특화 요인을 모두 강하게 갖고 있다. 또 이와는 다른 유형을 보여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등은 본래의 산업구조에 입각한 산업특화적 요인에 의해 고용이 성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등은 본래의 산업구조가 전국적인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통적으로 지역의 입지적 조건, 인프라, 지방정부의 정책 등을 포함하는 지역특수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구조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기별 변화할당분석은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에서도 놓치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999년-2002년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지역특수적 요인과 산업특화적 요인이 모두 높았던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2002년-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특수적 요인이 감소



하고 산업특화적 요인이 주로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특수요인과 산업특화 요인 모두가 쇠퇴한 것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들어서는 기존의 산업구조에 따라 고용증가를 추동해 왔던 지역들이 대부분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산업섹터에서 고용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특수 요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성장역량 또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던 것은 충청남도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였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이전의 시기에는 지역특수와 산업특화 요인 모두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취약하였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지역특수와 산업특화 요인 모두가 강세를 띠었으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본래 지역특수적 요인이 강했으나 이후, 산업특화적 요인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북도는 전반기에 비해 지역특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단계별 변화할당분석에 따른 지역들의 고용성장 요인들의 결합유형

	정태적 변화할당분석 (1999년-2006년)	시기별 변화할당분석		동태적 변화할당분석 (연평균)
		1999년-2002년	2002년-2006년	
1사분면 (지역+, 산업+)	경기, 광주, 울산	경기, 광주, 대전, 대구	경기, 광주, 울산 경남, 충남	경기, 광주, 울산
2사분면 (지역-, 산업+)	대전, 서울, 충북, 강원	서울, 전북, 강원 부산, 충북, 경북	대전, 서울	대전, 서울, 충북
3사분면 (지역-, 산업-)	전북,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전남	충남, 경남,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전남, 인천, 제주 부산, 대구	전북, 강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전남
4사분면 (지역+, 산업-)	인천, 충남, 제주	인천, 제주, 울산	충북	인천, 충남, 제주

주: 여기서의 +, -는 0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요인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고용과 관련한 지역 및 산업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산업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분

석결과는 기존 한국의 지역 및 산업정책이 지역들의 고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증가율 면에서 경기도 지역이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산업특화 요인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와 고용을 추동할 수 있는 영역인 지역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거의 압도적으로 지역특수의 요인이 그동안의 고용증가를 추동해 왔다는 점은 기존의 산업구조보다는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와 지역정책이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 이후의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시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표방하여 시행해 왔던 국가균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남·북과 부산 및 대구 등 대부분의 주요지역들은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시기에는 지역특수가 열악했던 충남, 경남 그리고 충북 등의 소수지역들이 부각된 배경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그 연장선상으로 이어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구상이 가시화되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충남지역은 이러한 구상의 핵심지역이었고, 경남과 충북은 이러한 충남과 입지적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인접지역이었다. 이와는 달리, 전남·북과 부산 및 대구 등 대부분의 주요지역들은 비록 혁신도시 10대 도시들 중의 하나로 선정되긴 했지만 당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정책의 시행과 관련 계획의 공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난 결과를 보여 주었다.<sup>9)</sup> 이러한 상황은 일찍이 Oates(1972)가 Decentralization Theorem을 통해 주장한 바 있던 이상적으로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단일한 수량을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함으로써 보다 더 큰 효용을 이뤄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간 관할을 둘러싼 외부효과와 관련 정책추진과 직결되는 의사결정비용,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과 이에 따른

9) 한편, 전반기에는 지역특수가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후반기에는 산업특화가 강화된 울산 지역은 전반기에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산업부문에서 고용이 추동되는 지역특수적 요인이 강했지만 후반기에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고용악화를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구조화된 산업특화의 요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으로 작용할 만큼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혼잡비용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즉, 2002년 이후 참여정부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며 이를 전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행정수도로서 특정지역인 충남 지역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참여정부는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특수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들의 반발과 이해관계가 정치권과 사법권의 결정을 통해 표출되면서, 과도한 의사결정비용을 소모하였고, 특정지역의 부각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누리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들의 행태로 인해 실제 이 정책의 취지였던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공익실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산업구조에 기반한 고용성장보다는 지역들이 갖는 고유한 인프라와 산업발전 및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과 같은 지역특수적 요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지역별 선호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 각 지방정부들의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사 및 재원 등에 대한 역량 등이 자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이제까지, 1999년-2006년까지의 지역별 고용자료를 대상으로 변화할당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들이 보여주고 있는 고용의 특성과 그 성장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별적으로 각 지역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이하게 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는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여타의 지역들에 비해 각 산업섹터별로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부문에서 실질적인 고용성장이 나타나게 하는 자원배분의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와 제주도는 지역의 입지적 조건이나 인프라, 지방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지역특수적 요

인이 고용성장을 추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합의 요인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분산이 지역들의 고용증가율의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기여도의 크기를 비교하여 지역의 고용성장에 대한 각 요인들의 전반적인 크기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역특수적 요인이 매우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배분적 요인은 중간, 산업특화적 요인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태적 변화할당분석과 동태적 변화할당분석에만 의존하게 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간과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9년-2006년의 기간 동안 가장 큰 변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시기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2년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보여진다. 2002년을 기점으로 지역특수가 강화된 충남, 경남, 충북 등의 부각과 산업특화요인과 지역특수적 요인이 모두 하락한 대다수 지역들의 증가 등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고용성장에 대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성장보다는 지역특수적 요인이 전반적으로 압도적이었다는 측면에서 고용과 관련한 지역의 입지조건과 인프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사실상 중앙정부 주도 하의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정부의 창의력 있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기조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록 지역특수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개별 지역의 측면에서는 지역특수적 요인보다는 산업특화적 요인이 고용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도 있다는 점, 변화할당분석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변화할당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각 지역별 통계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용에도 제한이 있는 등,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단위 자료사용의 제한으로 분석의 단

위가 16개 광역시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둘째, 변화할당분석의 시기로서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의미있는 변화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 시기와 관련한 실제적인 인과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성숙도에 따른 산업별 변화할당분석, 즉,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의 지역별 할당분석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 및 지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넷째, 변화할당분석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각 설명요소들의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충실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200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각 지역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사용한 지역별 고용증가요인의 엄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기호·장동구. 2005. “고용률의 의미와 유용성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경제분석》 11(2): 106-135.
- 김학훈. 2004.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성장: 변이할당모형의 적용” 《청대학술논집》 제2집: 549-570.
- 변필성·김광익·김태환. 2005. “지역경쟁력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 : 변이할당분석의 고용성장예의 적용을 토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267-284.
- 이정록. 2002. “공업단지의 입지와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여천산단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37-155.
-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68호: 205-234.
- 정순관. 2006. “지역산업발전의 영향요인분석과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129-150.
- 최병선. 1975. “변화할당분석을 통한 대구도시경제의 공업성장 분석” 《도시문제》 10(9): 52-73.
- 최영준·손창남. 2007. “노동시장의 지역간 격차와 효율성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논고》 7월호: 23-53.

<국외문헌>

- Andrikopoulos, A., Brox J and Carvalho, E., 1990. "Shift-Share Analysis and the Potential for Predicting Regional Growth Patterns: Some Evidence for the Region of Quebec, Canada," *Growth and Change* 21(1): 1-10.
- Arcelus, F.J., 1984. "An Extension of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15(1) : 3-8.
- Barff, R.A. and Knight III, P.L., 1988. "Dynamic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19(2): 1-10.
- Dunn, E.S., JR. 1960. "A Statistical and Analytical Technique for Regional Analysis,"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6: 97-112.
- Esteban, J. 1972. "Shift-Share Analysis: Revisited,"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2(3): 249-261.
- Esteban, J. 2000. "Regional Convergence and the Industry Mix in Europe: A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0: 353-364.
- Gracia-Mila, T. and McGuire T. 1993. "Industrial Mix as a Factor in the Growth and Variability of States' Econom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3: 731-748.
- Houston, David. 1967. "The Shift and Share Analysis of Regional Growth: A Critique," *Southern Economic Journal*. 33: 557-581.
- Marshall, A.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Co.
- Oates, Wallace E. 1972. "The Divisions of Functions among Levels of Government,"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 OECD. 2000.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Piore, M.J, and Sabel, C.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Saxenian, A., 1996.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 Traistaru, Iulita., and Wolff, Gunram B. 2002. "Regional Specialization and Employment Dynamics in Transition Countries," ZEI Working Paper B02-17. Center for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온라인 자료>

<http://www.kosis.kr>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1999-2006)

## &lt;부록 1&gt; OECD(2000)에 따른 산업분류 코드 (2Digit)

산 업	산업분류코드
농림어광업	01-14
경공업	15-22, 36,37
중화학공업	23-29, 33,34,35
전자산업	30,31,32
전기, 가스, 수도사업	40-41
건설업	45,46
생산서비스	65-74
유통서비스	50-64,92
개인서비스	55,92,93,95
사회서비스	76,80,85,90,91,99